

5월 왜곡 '전두환 회고록' 꼼수 재출간도 제동

광주지법 "암매장·광주교도소 습격 등 36개 표현 허위사실" 가처분 신청 인용...삭제 않고 출판·배포하면 1회당 500만원

일부 수정 후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다시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5·18 관련 단체가 회고록에서 삭제해 요구한 표현 40개 가운데 34개 표현에 대한 전부를, 2개의 표현은 일부를 허위사실로 보고 삭제하도록 했다.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을 유언비어로 규정된 부분을 비롯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 김대중 전 대통령 민중 혁명 기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암매장에 대해 "당시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마구 학살해 암매장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선대 뒷산에 묻었다는 주장, 시정 청소차에 시체를 대량으로 실어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도 있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을 피해 처분하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시 계엄군이 총격을 가해 상당수의 시민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당시 광주시민들로서는 계엄군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몰래 매장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만큼 유언비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고록의 표

현은 허위사실이며,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위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교도소 습격했으며, 이는 미전향장기수, 간첩, 강력범 등을 해방시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표현도 삭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당시 무장시위대는 교도소 인근에서 2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인근 거점을 방비하던 3공수여단의 일부 병력과 교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시위대 인원이나 무장의 정도는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고, 실제 3공수여단에 의해 바로 진압됐다. 오히려 시위대의 공격은 교도소 앞 도로를 오가는 비무장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계엄군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고록에서 공수부대의 혼란 상태 표현, 5월 21일 오전 일부 시위대의 공수부대원 위협 등 4개의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만한 소명자료가 없고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것이라며 삭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5·18 관련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회고록을 다시 출간했다.

5·18 관련 단체는 지난해 12월 재출간한 회고록에 대해서도 분석을 통해 왜곡된 표현이 40개에 이른다고 출판·배포하



5·18민주묘지 줄잇는 참배객 15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5·18단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는 "5·18 역사 왜곡 주장을 집대성한 회고록으로 인해 전두환이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됐고, 두 차례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도 모두 인용돼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전두환 스스로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폐기하고 참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조강하던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 '날벼락' 순천시 음주 뺑소니차에 치여 2명 사상

조강을 하던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이 음주 뺑소니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14일 오후 8시 52분께 순천시 별량면 확산리의 한 도로에서 마라톤 동호회 회원 A(45)씨가 조강을 하던 중 B(여·45)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와 함께 조강하던 C(47)씨도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마라톤 동호회회원인 A씨와 C씨는 퇴

근 후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이날 밤 9시 30분께 집에 있던 운전자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내연녀 5살 아들 폭행·실명시킨 20대 징역 18년 확정

내연녀의 5살짜리 아이를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살인미수 및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친모 최모(여·36)씨도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6년 10월 목포에 있는 최씨의 집에서 최씨의 아들 A(당시 5세)군을 폭행해 광대뼈 주위를 함몰시켜 시력을 잃게 하는 등 같은 해 7~10월 8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모 최씨는 A군이 수차례 눈의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치료하지 않

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이씨에게 아동학대중상해죄와 별도로 살인미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학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대신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비등간다며 양형기준 상한인 13년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폭행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미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양형기준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징역 18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

유신 반대 사진 판매 '긴급조치 위반' 70대 43년만에 무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진을 판매했다가 긴급조치위반죄로 처벌된 70대가 4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데모 사진 등이 들어있는 '보도사진 연감' 111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3년 긴급조치위반죄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었거나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해 공소 제기된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해 공소 제기된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성 변호사에 음란전화' 현직 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원이 이혼 상담전화를 가장해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처분.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지난 2월 13일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여성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부부 성관계와 관련한 은밀한 내용을 포함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것.

○당시 피해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인 '로이니스'에 '가사상담을 빚지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법원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서 A판사의 감봉징계가 적절하다고 의결함에 따라 최종 징계처분을 확정. /연합뉴스

5·18 참상 알린 피터슨·헌틀리 목사 아내 광주 방문 "남편과 함께 헬기사격 선명하게 목격했다"

헌틀리 목사 유해 17일 광주 안장

5·18 민주화운동 진실을 세계에 알린 미국인 목사 아들드 피터슨의 아내 바바라 피터슨 여사와 찰스 헌틀리 목사의 아내 마사 헌틀리 여사가 15일 광주를 찾아 5·18 목격담을 이야기했다.

바바라 여사는 "광주항쟁은 쿠데타로 접근한 전두환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함께 헬기 기총사격

을 집 2층 발코니에서 선명하게 목격했다"며 "아이들을 지하실로 숨겼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피터슨 목사를 '사탄'이라고 지칭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도 남겼다. 그는 "제 남편은 제가 전두환보다 잘 안다. 남편은 시와 광주와 사람을 사랑했고 사탄이 아니다"고 말했다.

마사 여사는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광주 상황을 파악하고자 앙림동 선교사 사택으



헌틀리, 피터슨 등 두 미국인 목사의 아내 마사 헌틀리(오른쪽)와 바바라 피터슨 씨가 15일 1980년 5월 당시 목격담을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친척을 보낸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남편이 받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서 간호

대학을 마친 친척을 우리 집으로 보낸다'는 연락이었다"며 "'미스 김'이라는 가명을 썼던 '미세스 최'를 기독교병원으로 데려가 직접 참상을 보게 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독교병원 상황에 대해서는 "현열하러 찾아오는 시민에게 너무 많은 피를 나눠줘서는 안 된다며 말려야 할 지경이었다"고 증언했다.

17일에는 '광주에 가고 싶다'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해 타계한 헌틀리 목사 유골 일부를 광주 앙림선교동산묘원에 안장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 빨리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